

KIEP

지역경제포커스

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.kiep.go.kr 137-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1년 4월 20일

ISSN 1976-0507 Vol. 5 No. 15

최근 독일 경제 활성화의 주요 요인과 향후 전망

이 현 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(hjeanlee@kiep.go.kr, Tel: 3460-1226)

-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독일 경제는 현재 빠른 추세로 위기 이전의 경제 상태를 회복하였음.
- 독일의 경제회복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음.
 - 대외적 환경 요인으로는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경제권과의 교역 증진이 독일 경제회복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음.
 - 독일 내 구조적 요인으로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, 유연해진 노동시장, 건전한 국가재정 운영 등이 있음.
 - 정책적 기여 요인으로는 독일 정부가 세 차례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국내경기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음.
- 수출호조가 주도한 독일의 경기회복은 유럽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, 독일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인해 2011년 이후 재정상황 개선과 함께 견조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다만 ECB의 기준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주변 EU 국가들의 재정위기 지속, 에너지 가격변동,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등 외부적 위험요소가 독일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,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 하락 또한 향후 메르켈 총리 및 우파연정이 계획하고 있는 정책 시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.

대외경제정책연구원

1. 독일 경제의 현황

-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독일 경제는 현재 빠른 추세로 위기 이전의 경제 상태를 회복하였음.
- 2009년 독일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경제성장률 -4.7%를 기록했으나 2010년에는 연초 예상치(1.4%)를 훨씬 상회한 3.6%를 기록함으로써 1990년 10월 통독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(표 1 참고).
- 특히 [그림 1]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2/4분기에는 전기대비 2.2% 성장함으로써 통독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.
- 2009년 -10.1%까지 하락했던 총 고정투자 증가율은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2010년에는 5.5%의 증가율을 보임.
- 회복이 더더 우려되었던 민간소비 지출도 0.5%로 회복세를 띠면서 전반적인 독일 경제 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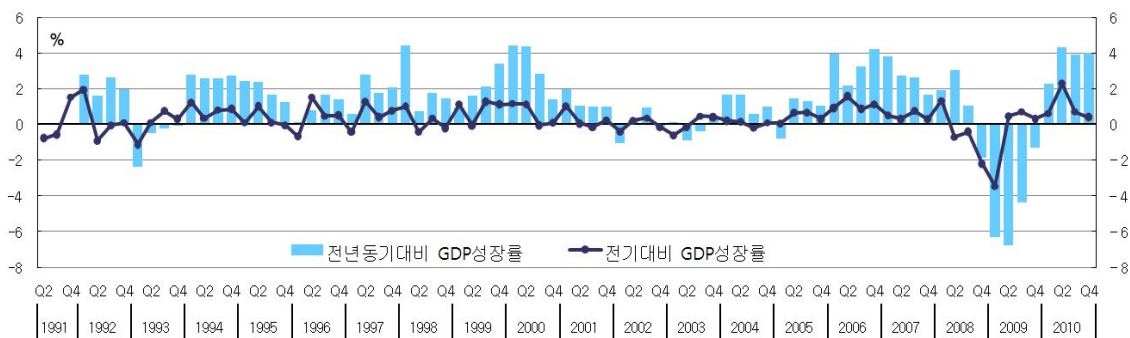
표 1. 독일의 연도별 GDP 성장률

(단위: %)

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
GDP	2.7	1.0	-4.7	3.6
민간소비	-0.2	0.7	-0.2	0.5
정부소비	1.6	2.3	2.9	2.2
총 고정자본 형성	4.7	2.5	-10.1	5.5
수출	7.6	2.5	-14.3	14.2
수입	5.5	3.3	-9.4	13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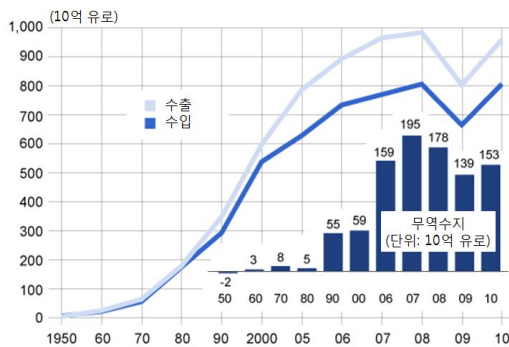
자료: European Commission(2010), *European Economic Forecast: Autumn 2010*; Bundesministerium fuer Wirtschaft und Technologie(2011), *Jahreswirtschaftsbericht 2011*.

그림 1. 독일의 분기별 GDP 성장률(1991~2010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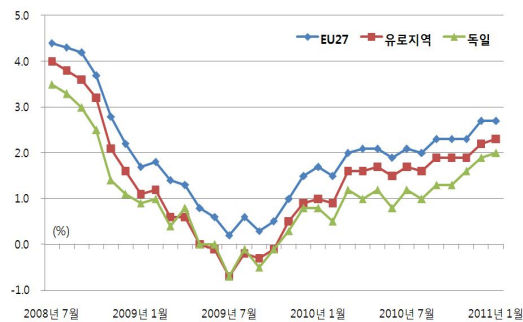
자료: 독일통계청.

그림 2. 독일의 연도별 해외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



자료: 독일통계청.

그림 3. 인플레이션 추이(전년동월대비)



자료: Eurostat.

- 독일통계청에 따르면, 2010년 독일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대비 19.4%, 21.3% 증가한 9,595억 유로, 8,062억 유로로 153억 유로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추정됨(그림 2 참고).
- 수출은 1994년 이래, 수입은 2003년 이래 플러스 성장세에 접어들었으나 2009년에는 수출입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.
-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, 기계 및 장비, 화학제품이 있으며, 이는 전체 수출의 46.6%를 차지하고 있음.
- 독일연방은행은 2010년 독일 정부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-3%, 정부부채는 GDP 대비 81.8%로 추정하고 있음.
- 2009년 독일 정부의 재정수지 또한 GDP 대비 -3%, 정부부채는 GDP 대비 73.4%로 기록되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 발발 후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와 함께 재정적자 및 정부 부채폭이 늘어났음.
- 물가수준은 경제성장과 함께 디플레이션의 우려에서 벗어났으며,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음.
- [그림 3]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인 물가하락으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었으나 2009년 7월에 -0.7%로 저점을 기록한 후 2011년 1월에는 2%를 기록함.
- 경제위기와 함께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던 실업률은 2009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 평균실업률 7.7%를 기록하였으며, 2011년 1월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전(7.5% 내외)보다 낮은 수준인 6.5%를 기록함.

2. 경제 회복의 주요 요인

가. 대외적 환경

-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경제권과의 교역증진이 독일 경제회복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됨.¹⁾
 - 2010년 독일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GDP 대비 45.9%, 40.7%에 이르는바 EU 평균(각각 40.5%, 39.7%) 및 유로지역의 평균(각각 40.6%, 39.3%)에 비해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편임(Eurostat 자료 기준).
 - 독일은 전통적으로 역내교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²⁾ 경제위기 이후 중국 등의 조속한 경기회복이 독일의 교역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.
 - 독일의 대아시아 수출은 2009년 1,131.8억 유로에서 2010년 1,478.7억 유로로 전년대비 23.5% 증가하였고, 독일의 대EU 수출은 동기간 5,006.5억 유로에서 5,782.3억 유로로 13.4% 증가함.
 - 중국은 독일의 7대 수출국(전체 수출의 5.6%)이면서 최대수입국(전체 수입의 9.5%)으로 2010년 교역량은 전년대비 38.5% 증가한 1,302억 유로임.

나. 구조적 요인

- 독일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그 수출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,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해외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함.
 - 독일은 전통적으로 자동차, 기계 등의 제조업이 우세한 산업기반을 형성하고 있는바, 계측기기 및 특수장비, 산업기계, 전기설비 등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부문에서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.
 - 2010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0.7%(4,636억 유로)에 달함.
 - 2009년 독일 수출에서 기계 및 운송설비와 기타 제조업 상품³⁾이 차지하는 비중은

1) 미국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약세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2009년 11월(월평균 USD 1.49/EUR 1)~2010년 6월(월평균 USD 1.22/EUR 1) 사이에 나타난 현상으로, 2010년 독일의 수출증대 효과에 일시적인 기여를 했으나 이후 유로화의 가치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2011년 3월에 USD 1.40/EUR 1의 평균환율이 기록되었으며 수출에서 환율효과는 미미해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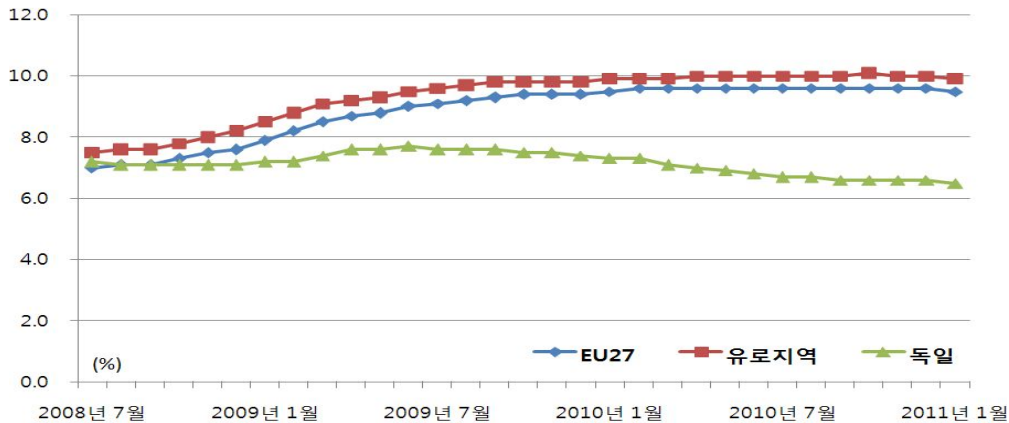
2) 독일연방은행에 따르면, 2009년 기준으로 EU 27과의 교역이 독일 전체 교역의 60.02%를 차지하였으며, 독일의 최대수출상대국은 프랑스, 최대수입상대국은 네덜란드임.

3) SITC 6, 7, 8 기준.

71.7%(5,788.8억 유로)에 달하며, 2000~09년 제조업의 연평균 수출비중은 71.7~77.6%였음.

- 2010년 총 고정자본투자 중 기계 및 설비에 대한 투자는 1,700억 유로로 전년대비 10.9% 증가한 수준임.
- 연구개발(R&D)에 대한 투자 역시 통독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비용대비 편익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.
- 2007년 GDP 대비 2.53%였던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인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2.68%, 2.78%를 기록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.

그림 4. 실업률 추이



주: 유로 지역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은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벨기에,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, 오스트리아, 아일랜드, 스페인, 포르투갈, 핀란드, 그리스, 슬로베니아(2007년 1월 가입), 키프로스, 몰타(이상 2008년 1월 가입), 슬로바키아(2009년 1월 가입), 에스토니아(2011년 1월 가입) 등 17개국임.

자료: Eurostat.

■ 유연해진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경제위기 속에서도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함.

- 2005년의 노동시장 개혁(Hartz IV)⁴⁾으로 다소 유연해진 노동시장에 2010년 메르켈 총리의 조업단축(Kurzarbeit)⁵⁾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일자리 나누기가 이루어져 실업 감소 효과가 나타남.

4) 하르츠(Hartz) IV라 일컬어지는 개혁안은 기존 국가 지급 실업수당의 수혜자 해당요건을 부양가족 수, 재산 보유 상태 등에 따라 더 엄격하게 조정하고, 금액 및 기간을 세분화하여 궁극적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등 경직된 독일 노동시장을 정비했음.

5)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업단축은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금속, 엔지니어링, 자동차, 전자산업 부문에 많이 도입된 근무형태로 전일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조업단축 근로자로 고용을 지속하는 것임. 고용주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근로자 고용 첫 6개월간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비의 50%가 환급되고, 7개월째부터는 100% 환급되며, 조업단축 근로자 임금의 67%까지 연방고용청에서 받을 수 있음. 또한 근로기간 동안 교육훈련 시 지출되는 비용은 지역 내 고용청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.

- 2009년 하반기 이후 EU 및 유로 지역 국가들의 실업률이 유지 혹은 상승세를 보이는 동안 독일의 실업률은 꾸준히 하향세를 나타냄(그림 4 참고).

■ 독일 정부의 건전한 국가재정 운영으로 위기 시 빠른 경제회복 기회를 마련함.

- [표 2]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5년 GDP 대비 -3.3%, 68%를 나타낸 독일의 재정수지와 국가부채는 2007년에 각각 0.3%, 64.9%로 호전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전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.
- 건전한 재정상태로 인해 경제위기 시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즉각적인 실시가 가능했음.

표 2. 독일의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(2005~09년)

(단위: GDP 대비 %)

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
재정수지	-3.3	-1.6	0.3	0.1	-3.0
국가부채	68.0	67.6	64.9	66.3	73.4

자료: Eurostat.

다. 정책적 기여

■ 독일 정부는 세 차례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국내경기 활성화에 주력한바, 이는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짐.

- 2008년 11월 일자리 보호(Schutzschirm fuer Arbeitsplaetze)를 기치로 하는 300억 유로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추진함.
- 1차 경기부양책은 경제를 건실하게 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며 가계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인프라 건설 등의 투자방안을 포함하고 있음.
- 2009년 1월 향후 2년간 적용될 500억 유로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함.
- 이 중 자동차 판매를 통한 내수회복 및 친환경적이면서 에너지 효율적인 차량보급 확대를 목표로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시행한 50억 유로 규모의 폐차보조금제(Umweltpraemie)⁶⁾가 가장 대표적임.
- 2009년 12월에 제정된 「성장촉진법(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)」⁷⁾이 제3차 경

6) 폐차보조금제는 9년 이상 된 중고차를 폐차한 후 신차 구입 시 2,5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형차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제도 종료 후 자동차 판매가 일시적으로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함.

기부양책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, 여기에는 개인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상속세 등의 각종 조세 혜택들이 포함됨.⁸⁾

- 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으로는 최고 6천만 유로까지 대출하는 기업의 모든 이자비용에 대한 면세혜택 제공, 면세 상한선 범위를 10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로 확대, 최장 5년까지 손실이월로 인한 초과세금 감면혜택 등이 있음.

■ 금융 부문에서도 정부 차원의 직간접적인 다양한 지원을 실시함.

-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발발 직후 4,800억 유로 규모의 금융시장안정화특별기금(SoFFin: Sonderfonds Finanzmarktstabilisierung)을 조성하여 4천억 유로는 금융기관의 보증, 800억 유로는 자본금 확충에 사용하도록 함.
- 2009년 3월에는 1천억 유로 규모의 독일경제기금(Wirtschaftsfonds Deutschland)을 마련하여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지급보증 및 대출을 실시함.
- 2009년 7월에는 부실자산을 배드뱅크에 위탁하여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「부실은행법(Bad Bank Gesetz)」을 제정함.

3. 평가 및 향후 전망

■ 수출 호조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의 경기회복은 유럽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.

- EU 집행위에 따르면,⁹⁾ 글로벌 수요의 증가에 따른 독일 수출의 5% 상승은 독일 내수의 1% 상승 → 독일 수입수요의 2.7% 상승 → 유로 지역의 수출수요 1.2% 상승 및 EU 회원국들(유로 지역 제외)의 수출수요 1.1% 상승 → 유로 지역의 내수 0.4% 상승 및 EU 회원국들(유로 지역 제외)의 내수 0.3% 상승효과를 가져왔음.

7) 국문으로 된 자세한 법안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의 「최신 외국법제정보」, 2010-02호, pp. 56~64 참고

8) 2011년 1월 26일 EU 집행위원회는 독일의 「성장촉진법」 중 일부가 리스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(Decision)을 채택함. 이에 독일 정부는 EU 집행위의 결정 내용을 즉각적으로 국내법에 수용하기는 했으나 결정 내용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아 항소를 제기한 상태임.

9) European Commission(2010), *European Economic Forecast: Autumn 2010*, pp. 16-17.

그림 5. 독일 재정수지 추이



자료: 독일연방재무부.

- 독일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일시적 증가가 불가피했으나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국가부채에 대한 감축 노력으로 2011년 이후 재정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
- 2009년 6월 재무건전성을 강조하는 「재정수지건전화(Schuldenbremse)법」¹⁰⁾을 제정하고 2011년 1월에 발효함.
- EIU에 따르면, 2009년 GDP 대비 3%의 적자를 기록한 재정수지는 2010년에도 -3%로 추정되며,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-1.7%, -1.2%로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(그림 5 참고).
- 독일 정부는 2009년 GDP 대비 73.4%로 나타난 정부부채가 2010년 81.8%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추정, 2011년에는 83.8%로 상승했다가 2012년에 다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10) 「재정수지건전화법」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2015년부터 GDP 대비 0.35% 이내로만 허용하고, 주정부는 2019년부터 재정균형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는 균형재정을 법제화시킨 첫 사례로서 독일 정부는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이를 권고하고 있음.

그림 6. 독일 Ifo 고용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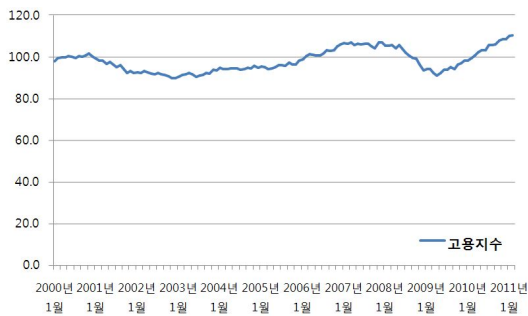


그림 7. 독일 Ifo 비즈니스 환경지수



주: 무역 및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독일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측정된 지수로 '2000년=100'을 기준으로 함.
자료: Ifo.

- 2011년 독일 경제는 기저효과 감소로 2010년보다 성장률은 다소 낮으나 견조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, 각종 경기선행지표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.
- IfW, IWH 등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2011년 3%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독일 정부는 2010년보다 1.3%포인트 낮은 2.3%의 보수적인 수준으로 예상함.
- 독일 정부는 전년대비 민간소비 1.6%, 정부지출 1.0%, 총 고정자본투자 4.3%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바, 특히 1.1%포인트의 내수확대는 향후 독일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데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.
- 비록 2011년에 독일 교역의 절대적인 증가가 나타나기는 하나 기저효과 감소로 수출이 6.5%, 수입이 6.4% 성장하고,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0.4%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.
- 한편 독일 정부는 2011년의 평균실업률을 2010년보다 0.7%포인트 낮아진 7.0%로 예상하고 있으며, 독일 내 고용률 역시 전년대비 0.3%포인트 상승한 0.8%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음.
- Ifo에서 발표한 2011년 1월의 고용지수 및 비즈니스 환경지수는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110.5와 111.2를 기록했는데, 이는 독일 기업들의 향후 고용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개선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심리를 보여줌(그림 6 및 그림 7 참고).
- 다만 ECB의 기준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주변 EU 국가들의 재정위기 지속, 에너지 가격 변동,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의 외부적 위험요소가 독일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.
- ECB가 2009년 5월 이후 1%로 동결되어온 기준금리를 2011년 4월 13일에 1.25%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유로존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.

- 그리스,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로존 내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, 특히 EU 재정에 가장 많이 기여해 온 독일에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.
- 독일은 최종 에너지 소비의 37.3%가 석유, 28.3%가 가스인 데 반해 석유 및 가스 생산은 각각 4.1%, 9.3%(2007년 기준)¹¹⁾에 불과하여 해외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바, 최근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과 함께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변동으로 인해 제조업 기반인 독일의 제조업 생산 및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.
- 또한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지면서 독일 불황타계의 주요 원동력이던 대중국 교역량 확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.
-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 하락에 따른 지방선거 패배는 향후 메르켈 총리 및 우파연정¹²⁾이 계획하고 있는 정책 시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.
- 지난 2월 21일 함부르크 주, 3월 27일 바덴-뷔르템베르크 주와 라인란트-팔츠 주의 지방선거에서 우파연정이 패배함에 따라 향후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- 특히 바덴-뷔르템베르크 주는 1953년 이후 기민당이 득세한 곳이었으나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로 녹색당(중도좌파)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 형성이 유력시되고 있어 지방의회로부터 의원을 선출하는 연방상원에서도 우파연정의 의석 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우파연정이 받는 정치적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. **KIEP**

11) European Commission(2010), EU Energy and Transport in Figures: Statistical Pocketbook 2010.

12) 기민/기사당(CDU/CSU)과 자민당(FDP)의 연정임.